



5면

"전주전·삼천 하도정비사업 하천법 위반"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음 2월 20일) 제3474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동'

전북자치도, 13개 기업과  
5000억 규모 투자협약 체결  
김제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전주 탄소융복합 중심 조성



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기회발전특구 참여기업 업무협약식(탄소융복합)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우범기 전주시장, 유경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본부장, 효성첨단소재, 알피티, 밥스, 티엠시, 하이즈복합재산업, 예코엔텍, 아이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세계 혜택과 규제 특례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시동을 걸고 기업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우범기 전주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경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련기사3면〉

전북자치도는 지난 4일 산업부에서 고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도내 주요 첨단산업별 기업이 입주가능한 후보지를 조사분석하고 시·군 의견을 수렴해 바이오, 미래형모빌리티, 탄소융복합, 첨단물류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 중이다.

전주시는 탄소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탄소융복합산업 육성을 계획하고 있어 밥스, 알피티, 가이비, 티엠시, 하이즈복합재산업, 예코엔텍, 등 탄소 관련 6개 기업과 1천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기업들은 탄소섬유를 활용해 항공기 부품, 자동차 엔진용 부품 등을 생산하는 탄소 전방산업 기업으로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탄소소재 생산 기

업인 효성첨단소재와 함께 탄소산업의 가치사슬체계(밸류체인)를 구축하게 될 예정이다.

효성첨단소재는 지난 2019년 친환경 첨단복합산단(3-1단계)에 6,8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공장 건축중인 대기업으로 전주 탄소산업육성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위해 전북자치도, 전주시,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

김제시는 지평선2산업단지과 백구일 반산업단지를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특장차 등의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에서도 대승, 일강, 대승정밀, HRE&I, 미래클, 창림모아츠, 에이엠특장 등 7개 중견·중소기업이 대거 참여해 4천억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자동차 부품 선도기업인 대승, 대승정밀, 일강, 친환경 건설기계를 개발·

생산하는 HR E&I와 미래클, 복지차량 및 2층전기버스 전문기업인 창림모아츠, 환경정소차 전문업체인 에이엠특장 등 독보적인 기술력을 겸비한 미래 모빌리티를 대표하는 기업이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추가 투자협약을 체결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 첨단산업 기반을 탄탄하게 갖춰 나가도록 준비하겠다"며 "도내 투자기업이 연관산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전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기업과 전북자치도가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향후 바이오, 모빌리티 등 분야별 기업을 추가 발굴해 유치하면서 전문가 자문, 산업부 컨설팅 등을 통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아 도내 주요 산업과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 날... 도내 후보자들 지지 호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28일 전북 곳곳에서 총선 후보자들이 유세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전주갑 후보, 국민의힘 양정우 전주갑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전주를 후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완주진안무주 후보,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후보, 진보당 강성희 전주를 후보)

## 도내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전북공직자윤리위, 작년 12월 31일 기준 관할 공개대상자 203명  
신고자 평균 재산액 7억7404만원으로 전년 대비 2049여만원 ↑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관할 공개대상자 203명에 대한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이달 28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전북공직유관단체장 6명과 시·군의회 의원 197명총 203명이며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고지거부대상 제외)의 재산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번 공개는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지난 2월 말까지 신고한 것을 토대로 이뤄졌으며, 2023년 최초 공개자의 경우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사항이다.

공직유관단체장, 시·군의회 등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재산공개대상자 203명의 공개내역은 28일부터 전북

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03명에 대한 재산규모 및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약 7억7,404만원으로 전년도 신고재산액 평균 대비 약 2,049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이상 5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85명 전체의 41.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5억 이상 10억 미만이 55명으로 27.1%를 차지하였고, 20억원 이상 보유자는 19명으로 9.4%를 차지하였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증감요인은 자산 상속, 채무감소, 주가 상승 등 가액 변동 요인의 상승과 급여(수입) 저축 등이며 감소사유는 개별공시지가 하락, 생활비·교육비 지출, 기존

신고대상의 고지거부 등으로 인한 재산 감소로 신고됐다.

한편,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 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등록재산을 거짓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은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위허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오늘까지 총선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

전북선관위, 도내 4956곳에... "훼손시 법에 따라 처벌"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4,956곳에 첩부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별취재반



전주매일 캠페인